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및 대책

22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23

1. 서론

최근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즉, 넘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도 화장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이 “왜 하필이면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들어와야 하는가”하며 환경문제를 이유로 입지반대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역내 토지가치의 상대적 하락 우려라는 경제적 이유도 크게 작용하여 공공시설 입지에 많은 어려움이 놓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공시설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어딘가에는 분명히 입지되어야 하므로 이제 무조건적인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는 한편, 당국에서도 반대이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를 해소하려는 정책이 아울러 모색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지역이기주의 실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90년 11월에 안면도 핵폐기물영구처분장설치 반대시위를 꼽을 수 있다. 과거처에서 핵물질연구기관인 서해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지만 핵폐기물처분장도 포함된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즉시 안면도 주민 1만여명이 강력한 반대시위를 하였고, 이에따라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의 철회로 일단락되었다. '90년 7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주민의 산업쓰레기매립장설치 반대운동이 격렬히 벌어졌다.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계획사업결정과 부산지방환경청의 산업폐기물매립시설설치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공사중이었는데 주민들의 매립장설치계획 전면백지화 요구에 따라, 동매립지는 연탄재와 잔토매립장으로 사용키로 최종확정되면서 주민시위는 진정되었다.

위와 같은 공공시설의 입지반대 현상은 특정장소의 특별한 시설 뿐만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이기주의의 원인및 해소방안

내집 뜰에는 절대 안된다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의사 표시가 점차 고조되는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환경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 행정에 대한 불신, 주민의견 수렴의 미흡, 경제적인 이해관계등을 꼽을 수 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그에 부응하여 오염물질의 급증, 환경문제의 집중발생등의 부의 효과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쓰레기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쓰레기매립시설을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순투기형태의 매립장이기 때문에 악취발생, 위생해충의 번식 뿐만아니라 쓰레기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등이 처리없이 그대로 환경에 노출되어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가 발생되고 이를 한 번 경험한 주민들은 신규매립시설이 완벽한 위생매립 방식으로 건설된다 하여도 오염저감 기술을 믿지 아니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환경보호 의지를 불신하는 경우도 많이있다. 민주화와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개발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단계에서의 지역주민 참여절차 없이 행정편의로 입안되어 강행추진되는 경우에는 제안자 의견의 편중, 입지결정 과정의 부당성, 비공개성등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환경문제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반공해시민단체의 적극 개입과 관련 지방의회의원들이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유권자들의 주관적인 반대의사를 걸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있다. 전국적으로 토지가 재산가치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의 결정이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표면적인 반대의사는 환경오염우려가 주가 되지만 그 뒷면에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더욱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은 이유들이 한 가지 또는 여러가지가 복합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반대는 과거의 혐오시설 뿐만아니라 수원지 건설,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도로등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시설들이 산업화, 도시화, 후생복지의 증대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시설들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므로 지역주민의 반대원인 분석 및 그 처방전을 계획단계 부터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충분한 재정확보를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완벽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설치내역을 주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하면서 환경오염 걱정을 불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행정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의 자료의 공개, 주민건의사항의 검토반영등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관련시설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의견과 협조·양해사항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 집단의사결정에 기초를 둔 시설입지의 결정,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의 감시 및 의견제시, 지역이윤방안의 모색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계해소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에



개 소각시설 운영중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저렴한 비용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지역난방, 온수공급을 해주거나, 매립지의 경우 매립종료후 수목공원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의 이행을 통하여 운영중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오염발생자 책임원칙을 준용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의 일부 또는 지방재정을 별도 확보하여 입지지역내에 사회간접 시설이나 후생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거나 지역주민을 당해시설의 운영인력으로 채용하는등 간접이익을 줌으로써 상대적인 지역낙후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4. 사례연구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반대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쓰레기처리행정의 협력기반으로 뿌리를 내리게 한 일본의 무사시노 시정부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관련행정에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다.

일본의 동경도내 무사시노시는 인구가 13만명이고 쓰레기발생량이 약 100톤이다. 1984년 까지는 인근 미타카시의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공동소각처리 하였으나 그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무사시노시 자체의 소각시설설치가 시급히 요청되었다. 그러나 시지역전체가 완전히 도시화되었으므로 시정부는 소각시설 후보지를 선정하여 시민의 동의를 얻는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무사시노 시민들은 소각시설설치 계획에 적극참여하여 관련 위원회를 조직하여 시설의 입지선정, 설계및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시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쓰레기처리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가. 무사시노청소센타 건설 특별시민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건의

위원회는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기본으로 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의 활동은 시설입지지역 인근주민들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고 입지선정과 설치계획수립에 시민참여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원회의 임무는 4개 후보지에 대하여 후보지

별 쓰레기처리시설입지, 환경보호측면, 보상시설등에 대하여 종합분석하고 이를 시정부에 건의하여, 또한 지역주민과의 협정서작성과 설치계획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시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35명으로 구성되는데 12명은 4개 후보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중에서 임명하고, 12명은 평범한 시민들중에서 임명하고 11명은 시설입지에 관련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1979. 12월에 조직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였고 그리고 10개월간 26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1980. 9월에 시장에게 특별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소센터 및 도심재개발시민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건의

이 위원회는 청소센터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입지 인근지역의 이용과 수집에 대한 위원회로서, 설치목적은 계획입지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와 이해를 위한 계획 그리고 계획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한 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9명은 계획지역 인근 시민대표이며, 5명은 전문가 그리고 3명은 시정부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시설입지가 지방종합운동장 후보지로 결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1981. 10월에 설립되었으며, 1984. 10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건의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 및 재이용에 있어서 염화수소의 배출허용농도를 25ppm으로 하고 폐기물은 가연성, 유리류, 금속류, 매립용, 폐지·폐설유류, 대형쓰레기등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처리시설 설치에 힘쓰고,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단체를 설립하여 대형쓰레기의 재활용 및 판매, 일용품의 수선등을 담당토록 하고,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센터건물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의 에어컨과 온수공급에 이용토록 한다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무사시노시 청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건의

청소센터가 '82년 부터 건설추진되어 '84년에 완공되었다. 1984년 12월에 인근지역 거주자 대표들과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센

터 운영중에 나타나는 문제를 협의하는등 사회복지계획과 생활환경의 질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청소센터 운영상태의 점검,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등이며,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9명, 시정부 및 청소센터의 관계관 3명으로 구성되었다.

라. 깨끗한 무사시노시 건설을 위한 시민위원회 규정

1977년에 쓰레기 문제해결대책추진을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쓰레기청소센터가 건설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쓰레기 감량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소센터가 완공운영되면서 본 위원회는 깨끗한 무사시노건설을 위한 시민위원회라고 명칭을 개정하였고, 1987년 위원은 49개 조직을 대표하는 120명으로 구성되어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의 임무는 깨끗한 무사시노시 건설운동 추진, 쓰레기감량화, 자원회수, 재활용, 분리수거, 환경보호등의 활동을 한다.

5. 결 론

최근에 쓰레기처리시설등 공공시설 입지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사 표명이 사업포기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사업계획의 부당성이 확실히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서로간의 양보 속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소단위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광역지역 또는 국가이익이 희생되어서는 국가는 물론, 그들이 속하고 있는 지역민의 이익도 멀지않아 크게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대이사를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평화적인 지역이익 표명기회와 이해관계인의 의사전달 통로의 마련 및 지역 지원사업의 추진등을 제도화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